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도-시군-유관기관 협력해 24시간 근무체계 확립 · 취약시설 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대비기간 동안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장비 점검과 한파 쉼터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와 함께 13개 협업가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특히 예비특보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고, 5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통해 대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도로 관리에 있어서도 총 8,361개 노선(6,863km)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별, 취약 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제설 취약 구간 62개소(196km)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 예방과 제설차 사전 살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396대의 제설 장비와 3만 8천 톤의 제설재를 준비했으며, 7천 명의 제설 인력과 19개의 전진기지를 확보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 제설 장비(98개소, 52km) 운용을 통해 제설 차량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제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확보한 11억 원의 대설, 한파 대비 재난 안전 특교세는 제설차 구입과 한파 쉼터 난방기기 교체 및 수리에 사용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건

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11월 시행)해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와 시기 등을 규정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습 결빙구간과 적설 취약 구조물 등 재해 우려 지역 416개소를 사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파 대책으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3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한파쉼터 5,438개소를 전면 개편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한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개의 응급 대피소도 지정하여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온 저하에 따른 농작물 및 농축수

산 시설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농작물 월동기 예방조치 및 난방기 가동, 양식 생물 보온 대책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고, 동파 방지를 위한 수도관 긴급 복구 및 계량기 보온조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설,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TV와 라디오, 반상화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 등 주민발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보 발표시 재난문자(CBS)등을 활용해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운동목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기온이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 그동안 준비한 사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여 인명 보호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 역량을 집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설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민 행동 요령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한의약 1위 전북의 '한방' 이 통했다

전북자치도, 2024년 한의약 육성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의 한의약 산업이 전국적 인정을 받으며 '한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한의약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부터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까지 지역사회의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수상으로 한의약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북이 도내 한의약 산업의 성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자치도는 '한의약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강화, 산업화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의약 3대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정책의 추진체계 마련 △한의약 서비스

확대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한 중점과제를 구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및 사회 취약계층의 증가로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조 △한의약 전문가 및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한약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산물 기반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전북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도는 '2025~2029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추진해 한의약 산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용·특용작물을 활용한 한의약 소재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 특산 한약재 기반 한방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16일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보육관련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자치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성황리 열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천여명, 화합 · 소통의 시간 유공자 표창 ·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사기 진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제22회 전북자치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열고, 전북 보육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화합, 소통, 공감 존중을 나누는 전북 보육'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

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 보육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보육 유공자 표창과 보육인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보육 퍼포먼스와 뮤지션 공연으로 구성된 힐링 콘서트와 진행해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돌봄과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전부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재정 특례,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

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15일, 제415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직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 늘지않아 도민에게 희망과 도약을 선언했을 뿐 과제만 산적해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과 그 실질이 부합해야 의미가 있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승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응답인재사업관련, 도에서는 학교(선생님)·주민(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 지원 방식 그대로 고수 중인 데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길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재정이 어렵다고 곳곳에서 난리인데 1박 2일에 2억이상 소요되는 전북포럼 등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더 담아주길 당부했다.

강태항 의원(군산1)은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전북·강원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은 취지는 좋으나 시군별 방문 현황이 저조한 것이 아쉽고, 센터 운용에 대한 권한을 정에서 가져와서 활성화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교육위, 도내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행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안주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 현황과 관련해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안주의 전복체육고, 간중초, 구이초 등 학교 시설공사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들을 교육부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타 공사에 사용하는 행태를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안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북교육청의 각종 계약 관련 낙찰차액만 1년에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임의로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순창, 부안, 고창 등 지역의 학급 수는 2008년 대비 2024년에 약 50% 감소했다"며, "시산초 등 일부 작은 학교들은 유유 교실 등 여유 공간을 해당 학교의 학생들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최병관 행정부지사, 현장 점검 ·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고창 운곡습지를 찾아 생태관광 운영 현황과 주요 기반시설 조성 상황을 점검하며,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1980년대 초 영광원지력발전소의 발전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들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이다.

이곳은 수달, 삿 등 총 8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운곡습지는 2011년 3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탐사르습지로 등록되며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국가지질공원, 2022년에는 탐사르습지도시, 202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며 생태관광의 명소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운곡습지를 찾는 탐방객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10만3,661명으로 2016년 2만 170명 대비 400% 이상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태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천리길과 생태관광 플러스와 같은 타 사업과 융복합하여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비즈니스 사업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운곡습지를 비롯한 전북의 생태·환경자산과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체류 인구를 유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사회서비스원 기능 · 역할 재점검을”

도의회 농복환위, 전북사회서비스원 · 공공의료원 등 대상 행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15일 전북사회서비스원 및 군산·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최근 정부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거친 영향에 대해 질의하며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최와 관련 개막식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2번 진행하는 등 허례허식과 의전에만 급급한 행사진행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행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전북도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원회를 구성·운영에 참고해 철저히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의료원의 불친절 민원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노력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장수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위탁이후 지속적으로 휴지상태에 놓여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정부와 전북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플랫폼 '전북인복지' 사이트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이정란 의원(남원1)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탁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하며,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특장인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삼가달라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수집·운반부터 처리까지 엄격하게 관리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의료원이 이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비용절감과 폐기물 처리가 동시에 완 벽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해외 품수 파견·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투자심사 재검토 지적

도의회 경산건위, 경진원 · 도 미래첨단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서난이 의원(전주9)은 경제통상진흥원은 동경사무소 직원 파견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대외협력과가 검토해 10일도 채 걸리지 않아 해외에 직원을 파견한 점, 해외 파견을 보내는데 사무실도 없고, 경제통상진흥원

의 통상 업무로 파견을 보낸 게 아닌 점 등 동경사무소의 품수 파견에 대해 꾸짖으며, 어떠한 파견 형태로 어떤 전문가를 보낼지에 최소한의 논의도 없었고, 이사회 회의 등 절차도 미이행 한 점에 대해 파견 절차를 다시 밟아 정식으로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해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정관이나 내규가 마련되기도 전에 해외에

공무원을 파견한 점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 지적하며, 향후 해외사무소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절차를 준수해 해외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재검토로 결정된 건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한 거면 준비에 매우 소홀했던 거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